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3면	도의회 “새로운 강원·행복한 미래 함께 뛰어요”	1
KBS 춘천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1년...일부 지자체 “배보다 배꼽이 커”	2
江原日報	온라인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연구개발·시험검사실 개소식 개...	3
江原日報	온라인	[이슈현장] 산천어축제 지역 인구 66배 넘는 150만명 돌파...	4
ms투데이	온라인	강원연구원 떨고있니? ‘도 넘은 불법행위’, 수사 의뢰 가능...	5
江原日報	15면	평창군 농어업인 신년인사회	6
江原日報	13면	한우협회 인제군지부 총회	6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시 포남2동 4더 캠페인	7
江原日報	12면	포남2동 봄철 산불 예방 발대식·4더 캠페인	7
江原日報	13면	토성농협 정기총회	8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 토성농협 정기총회	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박기영 안전건설위...	9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홍성기(홍천)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심오섭(강릉) 도의회 2024강원동계올림픽 지원특별...	9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9
江原日報	10면	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 1인당 150만원으로 인상	10
江原日報	11면	원주시의원 의정비 인상 다음달 14일 주민공청회	10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의견 수렴	10
강원도민일보	01면	선거해 짝수해 산불조심해...강원 산불방지 총력전	11
강원도민일보	17면	속초 영랑호 힐링 맨발걷기 황톳길 7월 초 준공	11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랜드 세계적 복합리조트로 도약 나선다	12
江原日報	05면	1·2심 정반대 판결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대법 가나	13
江原日報	07면	도내 어음부도율 1년 새 10배 넘게 늘었다	13
江原日報	16면	한탄강 물윗길 11만명 걸었다	14
강원도민일보	17면	양양지역 어업인 도루묵 개체수 회복 팔걷어	14
강원도민일보	02면	춘천고·원주고·영월 상동고 '자율형 공립고' 전환 신청	15

강원도민일보	11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업단 존치 확정	15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 유료관광지 외국인 방문 1위 '오죽헌'	16
강원도민일보	14면	홍천군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16
江原日報	06면	원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전면 백지화	17
江原日報	05면	춘천 아침 '영하 7도' 낮부터 추위 풀려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출산 의료 인프라 확충 과제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겨울철 경제대책 획기적이어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임의경매 급증, 빚투 한계상황 징후 아닌가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여야, 민생법안 처리 미적대면 총선서 심판받아	22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스포츠 23면



3·1절 건강달리기대회 도의회 “새로운 강원·행복한 미래 함께 뛰어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25일 원주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105주년 3·1절 기념 단축마라톤 및 시·군 건강달리기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지역 시민달리기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강원일보 마라톤 홈페이지(www.kw-marathon.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01월 29일 (월)



강원

고향사랑기부금 1년...일부 지자체 “배보다 배 꼽이 커”



[앵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인데요.

지역 재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막상 성적표가 기대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기부받은 돈보다 오히려 홍보비를 더 많이 써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부를 통해 고향을 살리자고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빠듯한 지자체 살림살이에 단비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 강원도의 모금액은 3억 3,000만 원.

당초 목표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홍보비로 쓴 돈이 4억 8천만원, 여기에 답례품 비용까지 더하면 오히려 받은 돈보다 쓴 돈이 2억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강원도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홍보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시행 첫 해는 제도를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비 상한을 두지를 않았는데."]

시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원을 모금한 평창군은 절반 이상을 홍보비와 답례품비로 썼고, 삼척시 역시 2억 7,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지출액은 1억 5,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류인출/강원도의원 :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깐 실적 대비 홍보비 낭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지난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52억 9,000만 원.

이 가운데 30% 가량은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답례품비까지 더하면, 지출 규모가 모금액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관련 법은 홍보비 등 운영비가 모금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규정했지만, 첫해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박상현/한라대학교 고향사랑기부제 지원센터장 : "(지자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데, 너무도 많은 기회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2년째.

이제는 내실을 다질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최중호

엄기숙 hotpencil@kbs.co.kr

江原日報

2024년 01월 29일 (월)

사회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연구개발·시험검사실 개소식 개최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이사장:신영재 홍천군수, 소장:조계춘)는 29일 식품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시험검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홍천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29일 식품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시험검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지난해 군비 19억 원을 확보해 ‘식품 자가 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실험실 리모델링과 필수분석장비 도입 등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맞춰 기존 시설을 재정비했다.

조계춘 연구소장은 “연구개발·시험검사실 개소를 통해 올해 식약처 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지역기업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먹거리로 홍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01월 29일 (월)

江原日報

사회

[이슈현장] 산천어축제 지역 인구 66배 넘는
150만명 돌파 비결은?

화천 산천어축제 폐막, 15년 연속 '밀리언 페스티벌'
'내 축제, 우리 축제' 지역주민의 간절함이 일군 성과
경제효과 수직상승, 사계절 관광상품으로 이어가야



2024 화천산천어축제가 15년 연속 '밀리언 페스티벌' 명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축제 마지막 주말에 관광객들이 겨울손맛을 즐기고 있다.



2024 화천산천어축제가 15년 연속 '밀리언 페스티벌' 명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축제 마지막 주말에 관광객들이 겨울손맛을 즐기고 있다.



2024 화천산천어축제가 15년 연속 '밀리언 페스티벌' 명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축제 마지막 주말에 관광객들이 겨울손맛을 즐기고 있다.

‘국가대표 겨울축제’인 2024 화천산천어축제가 관광객 153만1,000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축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28일 폐막한 산천어축제는 15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홍행 보증수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구름인파 관광객 유치 콘텐츠=주민들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소멸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 지역을 살찌우려는 자원봉사자, 기관·사회단체, 군의회, 공무원, 소상공인,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잠깐 나와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축제, 우리 축제’라는 인식과 애정 그리고 연대감이 매우 강했다. 메인 프로그램인 얼음낚시 이외에 선등거리, 세계최대실내얼음조각광장, 얼음썰매 등 관광객을 유혹하는 콘텐츠가 즐비했다.

외국인 관광객 10만 유치=10만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외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매년 연말 외신을 대상으로 축제 설명회를 열고 외신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서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외신보도를 타고 해외로 축제 소식이 확산됐으며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올 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인 산천어축제를 가장 먼저 꼽기도 했다. 해외 관광마케팅과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등도 주요했다.

상경기 수직상승=전문기관 자료를 보면 축제 경제효과는 1,300억원이 넘는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상경기가 수직상승했다. 축제장 농특산물판매센터에서는 10억원에 달하는 매출 성과를 거뒀다. 숙박하면 밤낚시 입장권과 파크골프장 입장권을 제공하는 ‘역발상’도 주요했다. 파크골프는 산천어축제와 더불어 화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다.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역발상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4계절 관광상품 구축=박대현 도의원은 “군부대의 날 등 국방의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보답 프로그램은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조웅희 군의원은 “남다른 스케일의 축제지만 그에 못지 않게 디테일, 즉 세심함과 많은 고민이 녹아 있고 무엇보다 축제장을 관리한 공무원들의 헌신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최문순 군수는 “겨울축제의 대명사인 산천어축제와 더불어 파크골프, 백암산케이블카 등을 연계해 사계절 관광상품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01월 30일 (화)

ms투데이

정치

강원연구원 떨고있니? ‘도 넘은 불법행위’, 수사 의뢰 가능성도

진광찬 기자

지난 26일 도 감사위 회의서 안건 상정
1~2주 내 처분 요구서 연구원 측에 통보
30일간 재심의 신청 등 행정절차 후 발표
도 기획조정실 관리·감독 부실 지적 제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 내부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감사 결과를 의결하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자치도 감사위는 지난 26일 자체 회의에 강원연구원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원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처분할지 심의하는 자리였다.

도 감사위는 의결한 내용에 대한 수정 절차 등을 거쳐 처분 요구서를 마련하고 조만간 연구원 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통보 이후 30일간 재심의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과가 나온다.

앞서 도 감사위는 연구원 일부 직원이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구비를 착복한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10~12월에 거쳐 감사에 착수했다. 고급 식당에서 미리 식대를 결제하는 ‘카드깡’ 수법을 쓰거나, 연구비를 연구와 전혀 상관 없는 개인물품을 사는 데 쓴 사례 등이다.

연구원이 감사위의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최종 결과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연구원의 신뢰에 작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적절 예산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MS투데이 DB)

일각에서는 연구원을 감독하는 도 기획조정실의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 감사위에서도 지난해 8월 연구원 내부 소급 승진 논란과 관련해 현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내리고선, 도 기조실에도 철저한 지도를 요구한 바 있다.

정재웅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춘천)은 “연구원을 관리·감독 부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특정감사 결과와 별개로 도정 차원에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와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원은 현 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 편향성, 소급 승진 논란을 비롯해 최근에는 ‘기후 위기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초빙해 강의하거나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내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현 원장도 여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연구원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수장과 임명권자 모두 책임이 막중하다”며 “강원도정의 인사조치와 강도 높은 쇄신안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5면



평창군 농어업인 신년인사회 평창군농어업회의소(회장: 전영록)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군의장,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3면



한우협회 인제군지부 총회 전국한우협회 인제군지부 정기총회가 29일 인제군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이춘만 인제군의장, 엄윤순 도의원, 김도형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2면



강릉시 포남2동 4더 캠페인 강릉시 포남2동(동장 이정순) 4더 캠페인(더친절·더안전·더깨끗·더따뜻)이 29일 포남2동 봉수대에서 최승순 도의원, 박경난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2면



포남2동 봄철 산불 예방 발대식·4더 캠페인 강릉시 포남2동(동장:이정순)은 29일 최승순 도의원, 박경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봄철 산불 예방 발대식과 '4더 캠페인'을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3면



토성농협 정기총회 토성농협(조합장:김명식) 제63기 정기총회가 29일 토성농협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군수,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업위원장, 이순매 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7면



고성 토성농협 정기총회 고성 토성농협(조합장 김명식) 2023년도 제63기 정기총회가 함명준 군수, 이양수 국회의원, 이순매 부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업위원장, 대의원, 영농회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토성농협에서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인물동정 12면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릉

시육계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리는 육계농협제63기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인물동정 10면
제인대회 및 신년인사
회에 참석한다.

정재웅(위 왼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박기영(위 오른쪽) 안전건설위원장·박관희(아래 왼쪽)·양숙희 도의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2024 강원경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인물동정 14면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홍천

서석농협본점에서 열리는 서석농협제63기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인물동정 12면



심오섭(강릉) 도의회 2024강원동계올림픽지원

특별위원장은 30일 낮 12시부터 강릉·평창·횡성 일원 올림픽상황실을 등회하여 각 중사자들을 격려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인물동정 17면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30일 낮

12시 강릉시글로벌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0면
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
1인당 150만원으로 인상

【춘천】속보=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가 1인당 150만원으로 인상(본보 29일자 10면 보도)된다.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에 따라 춘천시의원은 올 한 해 월정수당 3,136만4,280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더해 4,936만4,280원을 지급받는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1면
원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다음달 14일 주민공청회

【원주】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인상될지 주목된다.

원주시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같은 달 1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잠정 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2월8일까지다.

앞서 시는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시의정비심의위를 통해 확정된 인상안은 올 3월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1면
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의견 수렴

내달 14일 시청서 공청회

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의 새로운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기초의원 의정활동비가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이 가능해졌다. 지난 2003년 후 20년만이다. 이는 기초의회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기초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 유능한 인재의 기초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자 조직직권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시된 의정활동비 인상 가이드라인은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동결 또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계 추천

을 받은 총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최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는 가이드라인 원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시는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심의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 의견을 반영, 내달 중 의정활동비의 새로운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가 결정한 지급 기준은 오는 3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원주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793만원을 합한 총 4113만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수준이다. 권혜민

2024년 01월 30일 (화)

강원도민일보

종합 01면

선거해 짝수해 산불조심해...강원 산불방지 총력전

44개 유관기관 산불방지협의회
 헬기 26대 진화현장 투입 예정
 올해 '선거해 짝수해' 징크스
 봄철 대기 건조 산불예방 만전

'선거있는 짝수해 산불징크스'를 안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9일 강릉시청에
 서한전 등 4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 산
 불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건축
 물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산소화기 71가구, 간이 스
 프링클러 설비 250가구와 비상 소화장
 치 2474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임산통제
 구역 60만 4000ha, 등산로 1219km를 폐
 쇄하고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12만
 9000ha 등은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임차 헬기 8대 등 헬기 26대를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강원도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
 는 강원이가 갖고 있는 징크스 때문이다.
 동해안에서는 15대 총선이 있었던 지
 난 1996년 4월 고성군 죽왕리 산불로
 3762ha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2000년에는 16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4월 초에 동해안 전역을 덮친 산불이 발

강원 '선거 있는 짝수해'
산불 징크스

1996년 4월 (15대 총선)	▶ 고성군 죽왕리 일원 3762ha
2000년 4월 (16대 총선)	▶ 동해안 전역 2만 3794ha
2004년 (17대 총선)	▶ 속초 청대산·강릉 옥계면 산불
2006년 봄 (4회 지선)	▶ 강릉 죽헌·난곡·유천동 산불 속출
2018년 2월 (7대 지선)	▶ 삼척 노곡면·도계읍 117ha

생, 2만 3794ha의 산림이 초토화됐다.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04년
 에는 속초 청대산과 강릉시 옥계면에
 서 산불이 발생했다.

2006년 봄에도 징크스는 계속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포도립공원을 둘
 러싸고 있는 강릉 죽헌·난곡·유천동에
 서 도개비 산불이 속출했고, 2018년
 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겨울인 2월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에서 산불이
 발생, 사흘동안 산림 117ha가 잿더미
 로 변했다. 짝수해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를 사흘 앞두고 5월 6일에 강릉 성
 산면과 삼척시 도계읍에서 잇따라 대
 형산불이 발생하면서 민가 수십채가
 전소되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바람이 많이 불고 대
 기가 건조해 산불이 쉽게 날 수 있는 환
 경"이라며 "담뱃불 등 작은 불씨 관리에
 온 도민이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
 고 했다.

신재훈·이연제

2024년 01월 30일 (화)

강원도민일보

지역 17면

속초 영랑호 힐링 맨발걷기 황톳길 7월 초 준공

4억원 투입 세죽장·쉼터 등 조성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영랑호 일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한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랑호유원지산책길
 (스토리자전거-안축시비 방면) 내
 에 황토 포장(400m) 및 황토족탕 등
 을 설치해 이색적이고 건강한 체험형
 맨발걷기 산책길 조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도
 비 예산 2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억원을 확보 1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7월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황톳길 조성사업은 기존의 영
 랑호 산책로 약 400m 구간을 황토로
 포장하고 주변에 황토족탕, 황토볼
 지압원 등 다양한 체험형 시설과 세
 죽장, 쉼터, 신발장 등 편의시설을 설
 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최근 전국적
 으로 인기인 맨발걷기 열풍에 힘입어
 속초 8경 중 하나인 영랑호에 힐링 맨
 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
 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황톳길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속초
 시가 국내 맨발걷기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종합 02면



강원랜드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강원랜드 세계적 북합리조트로 도약 나선다

31명 구성 경쟁력강화 특위

3월 말 개선 방안 발표 예정

강원랜드가 세계적 북합리조트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강원랜드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학계·관광·언론 등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랜드 북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최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외부 전문위원 14명, 폐광지역 위원 8명, 내부 위원 8명 등 총 31명이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구성됐다. 분과 별로 대국민적 이미지 개선 방안과 카지노 시설 개선방향, 리조트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특위는 약 2개월 동안 분과회의를 거쳐 3월 말쯤 '강원랜드IR 경쟁력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철규 위원장은 "특위 제안을 토대로 정부·지자체·지역주민과 협력해 강원랜드를 국내 최고의 북합 리조트로 만들어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폐광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랜드를 4계절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패밀리형 북합리조트'로 재구조화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중앙정부와 강원도, 지역, 각계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2024년 01월 30일 (화)

江原日報

사회 05면

1·2심 정반대 판결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대법 가나

정부·도·한전 300억대 소송전
'한전 일부 승소→전부 승소'
대법원 상고 검토 절차 착수

재난안전법 조항 혼란 부추겨
이재민들 "법 개정 추진돼야"

속보=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
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구상권
소송의 1, 2심 결과(본보 지난 22일
자 5면 보도)가 크게 엇갈리면서 정
부가 예상초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
황에서 소송을 강행해 혼란을 초래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29일 한전
과 정부 등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비용상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
받았고 2주 이내로 대법원 상고 여부
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에 구상권 청구 근거 조
항이 마련된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
된 것은 2019년 고성 산불이 처음이
다. 항소심에서 정부가 완패한 가운
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관련 법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 2심 재판부는 재난안전법의 동
일한 조항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렸
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사회보
장적 성격의 재난지원금(학자금 면
제, 자금 융자 등)'에 대해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한
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의무 등에 반
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며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또 재난지원
금 중 사회보장 성격이 아닌 '대위변
제 성격의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 액수
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했다고 보았
다. 특히 한전이 이미 이재민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
가 언제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면 원인 제공자로서는 신속한 보
상을 할 필요가 없고, 구상권 행사를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2021
년 정부와 지자체에 구상권 청구 소
송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가 이재민
들을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않
고, 사법부에 판단을 떠넘기고 있다"
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반
발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소송을 강행
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다시는 이
런 혼란을 겪지 않게 애매모호한 법
조항 개정 등이 추진돼야 하고, 정부
는 구상권 행사에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림기자**

2024년 01월 30일 (화)

江原日報

경제 07면

도내 어음부도율 1년 새 10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
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음부도율
이 1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돈
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
아지면서 대출 연체율 또한 역대 최
대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어음부도
율은 0.21%로 집계됐다. 2022년 0.
02%였던 어음부도율이 1년 만에 10
배 넘게 뛰었다. 이는 2014년 5.4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어
음부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 기준 0.21% 9년 만에 최고치 내수 침체·자금 사정 악화
기업대출 연체율 0.24% 역대 최대·법인 파산 7건... 정책지원 절실

0.02~0.05%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다.

어음부도율은 일정 기간 어음결제
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
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와 그에 따른 내수 침
체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장기 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이 많아지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기준 도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24%로
집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2020년 0.14%, 2021년
0.13%에서 경종 뛰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문을 닫
는 회사도 속출했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도내 법원이 접수한 법

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연간 7건으로
2022년 1건 발생했던 것에 비해 크
게 늘었다. 개인 파산 접수가 2022년
1,010건에서 2023년 907건으로 오
히려 소폭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장은 "제조업,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
권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위기 우
려가 커진다"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취약기업이나
한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6면

한탄강 물윗길 11만명 걸었다

한탄강변 가까이서 체험... 겨울 관광 핵심 자리매김
올겨울 입장 수익금만 5억... 지역상경기 활성화 도움

【철원】철원 한탄강 물윗길이 올겨울 1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입장 수익금만 5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말 문을 연 한탄강 물윗길은 약 8km 구간에 2.5km 길이의 부교를 설치한 트레킹 코스다. 태봉대교~순담계곡

을 잇는 한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 송대소 주상절리와 은하수교, 승일교, 고석정, 마당바위 등 주변 명소를 모두 둘러볼 수 있어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 관광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 시즌 한탄강 물윗길에는

11만3,000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입장 수익금은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12만명이 찾아 입장료 6억4,000만원을 넘겼던 지난해보다 8만여명 늘어난 관광객 20만명 돌파 및 입장료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의 입장료 절반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올 3월 말까지 한탄강 물윗길을 운영하고 봄시즌 고석정 꽃밭 조성을 통해 철원관광 활성화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현종 군수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많은 관광객이 한탄강 물윗길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윗길을 운영하고 관광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명품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7면

양양지역 어업인 도루묵 개체수 회복 팔견어

어획량 급감 축제 개최 등 난항
물치리어촌계 자연산란장 조성
그물 10닥 설치 차후 확대 검토

올해 동해안의 대표적인 겨울철 별미로 손꼽히는 도루묵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양양지역 어업인들이 도루묵 개체수 회복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양 물치리어촌계는 최근 신년총회를 열고 도루묵 개체수 회복을 위해 연안에 자연산란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치리는 도루묵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어촌계 주관으로 도루묵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동해안 곳곳에서 열리는 도루묵축제의 원조이기도 한 ‘양양 물치항 도루묵축제’는 최근 들어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도루묵을 확보하는 등 축제 개최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계원들은 행정기관에서의 도루묵방류계획과 별개로 산란철에 맞춰 도루묵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개체수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루묵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물코가 큰 폐그물을 설치해 산란을 돕고, 산란이 끝난 후에는 조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물을 항

구 내로 옮겨 부화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현 물치리어촌계장은 “도루묵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연안에 도루묵이 산란할 해초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판단”이라며 “올해 우선 10닥 정도의 그물을 설치해 도루묵 산란처로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훈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종합 02면

춘천고·원주고·영월 상동고 '자율형 공립고' 전환 신청

속보=정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형공립고(자공고)를 추진(본지 1월3일자 4면)하는 가운데 강원도내에서는 춘천고·원주고·상동고가 자공고 선정에도전한다.

29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 26일까지 강원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공고 신청 공문을 접수했다. 마감결과 춘천고, 원주고, 영월 상동고 3곳이 자공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세 곳 모두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자체협약형' 모

델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31일 자체 협의를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한 3개 학교의 결격사유, 보완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에 자공고 신청서를 제출할 학교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 곳 모두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고, 구성원들의 의지도 확고한 상황"이라며 "특히 춘천과 원주는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를 준비 중이어서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가산 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1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업단 존치 확정

도·시·센터 긴급회의 철수 철회
5월 남원주 창업지원허브 입주
창업가 발굴·뉴딜사업 등 추진

속보=원주를 떠날 것으로 우려됐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역사업단(본지 1월 2일자 18면 등)의 원주 존치가 확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긴급회의를 하고 원주지역사업단 원주 존치를 결

정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역사업단은 현재 사용중인 연세대 미래캠퍼스 공간을 오는 4월까지 무상 이용하고 5월 남원주역세권의 창업지원허브로 이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활용,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원주지역사업단은 센터 본원 공간 이전 및 통합을 이유로 지난해 창업지원허브 입주 포기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지역사회에는 사실상 원주 철수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지역 경

제계가 원주 존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원강수 시장이 원주 존치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놓는 등 지역사회가 원주지역사업단 사수에 본격 나섰다.

이같은 노력으로 원주지역사업단의 원주 존치가 성사되고 당초 계획인 창업지원허브로의 이전이 가능해졌다.

특히 핵심 기관 입주 불투명으로 기능하락이 우려됐던 창업지원허브(본지 1월 29일자 15면)가 창업지원 기능을 갖춘 미래산업진흥원이 되는

원주지역사업단 입주 확정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됐다.

원주지역사업단은 강원형 뉴딜사업 지원 업무와 유망 창업가 발굴,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중소기업의 e커머스 판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 원주 청년 창업 육성과 정책 수행에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원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mod1600@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2면

강릉 유료관광지 외국인 방문 1위 '오죽헌'

참소리·환희집박물관 순 선호
올림픽 기간 대부분 해변 찾아
관광택시 'K-컬처 코스' 인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맞아 선수단 등 많은 외국인들이 강릉을 방문한 가운데 지역 내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유료관광지 1순위는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은 강릉시 주요 유료관광지점 1순위는 오죽헌·시립박물관(2915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참소리박물관(746명), 환희집박물관(84명) 등 순이다. 국내 관광객의 경우 1순위는 오죽헌·시립박물관(43만 5971명)이며, 이어 정동진레일바이크(35만 5879명), 하슬라아트월드(28만 5690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지역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주요 관광지는 BTS정류

장과 도깨비방파제, 오죽헌, 경포해변 등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영한 결과 관광지 코스로 'K-컬처 관광지'가 담긴 코스와 '경포권 관광지' 코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기존 5가지의 외국인 관광택시 추천 코스가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맞춤형 코스 제작도 가능한데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해변가 코스와 함께 순두부젤라또 가게

를 의외로 방문 코스로 많이 추가하신다"고 설명했다.

현재 2024 강원대회 기간 동안 경포해변과 초당순두부마을, 안목커피거리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런지 2018때보다 외국인 손님이 많지 않았고, 올림픽 기간 이용한 대부분의 외국인 손님들의 목적지는 경포해변이나 경포호수 부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지역 14면

홍천군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오늘 유관기관 5곳 업무협약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시너지
전문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홍천지역에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강원대·강원테크노파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등 5개 기관은 30일 강원대에서 김진태 도지사, 신영재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이번 협약식은 면역·항체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와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지역 첨단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구축 및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연 현장실습 교육 및 위탁 교육 등 운영 △교수 및 교육

인력에 대한 지원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및 후속사업 연계·협력 등을 협약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석·박사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대 역시 이 공모에 도전할 예정으로 바이오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할 경우 이번 업무협약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천군 역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가항체클러스터 내 전문인재양성기관인 면역·항체 전문대학원을 홍천에 유치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이 홍천군 미래성장추진단 첨단산업팀장은 "이제 시작인 단계지만 면역·항체 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이를 홍천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자도, 강원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역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yoosh@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종합 06면

원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전면 백지화

속보=원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하는 현 부지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본보 지난 15일자 4면 등 보도)하려던 강원교육당국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2024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원주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심사결과, '이전적지 활용계획 전면 재검토 보고 후 추진'으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원주교육청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 부지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아닌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 다시 보고하라는 뜻이다.

단설유치원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부장을 맡고 있는 현각 스님은 "중투위의 현명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원주교육청 이전적지에 유아생존수영장, 어린이 전용 공연장·박물관 등 지역 내 모든 원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원주는 춘천, 강릉과 비교해 전체 원아 수 대비 공립단설유치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이라며 "중투위 결정은 공립유치원 대기수요

중투위 "교육청 이전하되, 부지에 다른 활용 방안 찾아 재보고" '건립 철회' '축소 반대' 주장했던 도내 교육계는 희비 엇갈려

가 많은 원주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 상당히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원주교육청을 옛 학성초교 부지로 이전하면서 현 청사 활용 방안으로 인근 공립병설유치원을 통합해 14학급 규모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계획이 지난해 2023 제4차 중투위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수요 재검토' 등의 요구조건을 단 채로 통과되자 도내 교육계는 '해당 유치원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는 사립유치원 측 주장과 '설립 규모를 축소해선 안 된다'는 공립유치원 측 주장이 팽팽

히 맞서왔다.

도교육청은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및 보완해 차후 중투위에 재보고하고, 원주교육청 이전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행정과장은 "원주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은 더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빠르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사회 05면

춘천 아침 '영하 7도'

낮부터 추위 풀려

30일에도 강원지역은 대관령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겠다”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서풍이 불면서 31일부터는 추위가 풀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5도, 평창·정선 영하 8도, 춘천 영하 7도, 원주 영하 4도, 강릉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사설/칼럼 19면

출산 의료 인프라 확충 과제

-저출산 속 산모 고령화 불구 진료 여건 미비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내 여성의 출산 연령도 높아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지역 여성이 임마가 되는 나이가 지난 12년 새 2세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20대 산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40대 이상 산모는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인구 소멸 위기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산모를 위한 의료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해 정책적 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산모의 고령화입니다. 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0.89세였던 평균 출산 연령은, 2022년은 32.75세로 12년 사이 1.86세 높아졌습니다. 이 기간 연도별 연령을 보면 2012년 31.2세로 31세를 넘긴 데 이어 2018년 32.11세로 다시 32세를 넘었습니다. 강원의 출산 평균 나이가 20대였던 것은 2005년 29.89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40세 이후 출산도 많이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강원여성 1000명당 연령별 출산 경험을 보면 40~44세의 출산 경험은 2010년 4.4명에

서 2022년 8.4명으로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25~29세의 경우 같은 기간 96.8명에서 43.1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매년 30대 초반의 출산 경험이가장 높았으나, 이 연령대 출산 경험 역시 2010년 108.7명에서 86.8명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반면 30대 후반의 출산 경험은 같은 기간 29.4명에서 44.8명으로 늘어 반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저하와 산모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 안전망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9개 군지역은 임신 부나 아이가 진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가 지역별 특정 기간에 진행하는 순회진료 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정선과 고성을 제외하고는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출산과 관련한 의료 기반 확충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도내 여성들도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인다는 정책적 목표와는 별도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30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원 겨울철 경제대책 획기적이어야

-한국은행 동향조사, 실업자 급증에 생산 부진 드러나

겨울철 들면서 강원주민 삶이 더 고단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역시 부진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24년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에서 소비심리 위축이 경영악화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최근 내놓은 '강원 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에서도 같은 맥락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최신 동향에서 12월 중 강원지역경제는 11월에 비해 다소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통행량이 줄어든 점 등에 비춰볼 때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날씨로 인해의복 판매 등에서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를 중심으로 카드 매출이 늘긴 했으나, 방문자가 늘어난 만큼 매출액이 올라야 하는데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관광업 분야 방문자 수는 7.7% 늘어났으나 관광업 매출은 2.0%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를 보면 더 암울합니다. 12월 중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그 전년도 12월에 비해 무려 12.7% 급감했습니다. 전달인 11월

에 비해서도 1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은 건축 분야에서도 하강 국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23년 10~11월 건축 착공 면적은 22년 10~11월에 비해 -40% -32%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주거용 건축공사가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건설 분야 일자리 감소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강원은 겨울철이면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급증하는 현상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86만여명, 11월 85만여명이던 취업자가 12월에는 78만여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는 10월 10만명이던 취업자 수가 12월엔 절반 이하인 4만5000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서비스업 역시 10, 11월 62만명선이던 것이 12월 59만명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했음은 물론입니다. 11월 1만8000명이던 실업자는 12월 5만2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3.0%대이고 특히 전기, 가스, 수도 항목에서는 9% 인상률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히 겨울철 경제대책이 제대로,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사설/칼럼 19면

道 임의경매 급증, 빚투 한계상황 징후 아닌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자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빚을 얻어 집을 산 집주인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본격적으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징후가 아닌지 걱정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545건으로 2022년 4,312건보다 1,233건(28.5%) 늘어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1,079건으로 전년(879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임의경매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빚을 얻어 산 집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면 지역사회 전반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도내는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집을 싸게 팔아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집을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경매로 넘

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하우스 푸어의 집들이 계속 해서 경매로 나올 공산이 크다. 불황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역전세의 우려도 높아진다. 경매 낙찰가가 일반 시장 거래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값 회복의 발목을 잡을 여지도 많아진다. 그만큼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경매 물건 폭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경매 물건 급증은 위험 요인을 무시한 투자가 낳은 결과다. 그런데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어서 염려스럽다.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에는 빚 많은 사람의 고통이 무척 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빚투의 이면에는 성급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이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 정책 경쟁도 빚투를 부추기는 듯싶다. 하지만 경고가 있따르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금융통화 당국도 가계 부채 리스크가 지역경제의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30일 (화)

사설/칼럼 19면

여야, 민생법안 처리 미적대면 총선서 심판받아

21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여야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주요 민생법안 입법은 입장 차이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과 같은 여야 텃밭의 표심과 직결된 법안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쟁점 민생법안을 두고는 섣불리 달리고 끝장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을 민생법안으로 내세운다.

즉, “영광 한빛원전,

울진 한울원전, 기장 고리원전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구분할 수 없는 민생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운다. 여야는 입장 차를 좁혀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마지막 회기다. 이를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와 무관한 입법은 서둘러야 한다. 더는 논란으로 민생법안이 지체돼선 곤란하다. 첨예한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법

안은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려야 한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탓에 서민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런 비상 경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만 계속하면 4월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어느 당도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없다. 요즘 국회 행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번 21대 국회(2020년 5월30일~2024년 5월29일)에서는 2만4,381

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 발의 2만2,567개, 위원장 발의 1,078개, 정부 발의 736개다. 이중 처리된 법률은 7,495개로 전체 발의된 법안

전세사기특별법·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첨예한 입장 차이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 해

정치와 무관한 입법, 타협으로 신속한 처리를

의 30.74%에 불과했다. 처리된 법안 중에서도 350개는 부결, 폐기, 철회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29.31%만 통과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염치없게도 월급을 꼬박꼬박 챙긴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당돌한 생각을 한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니 또 하고 싶기도 하겠다. 이들은 온통 총선 후보 공천에만 관심이 있다. 국회의원 상당수는 머지않아 재래시장의 허름한 가게 앞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타나 손을 내밀며 허리 굽혀 인사할 것이다. 이번 총선만큼은 이런 행태를 받아 주어진 곤란하다.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